
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남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6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0. 26.

발 의 자 : 김남국 · 김용민 · 김종민
박범계 · 박주민 · 백혜련
소병철 · 송기현 · 신동근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2019. 12. 30.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, 2020. 1. 14. 공포되었음.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, 「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」상 검찰청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(안 제13조제2항, 제24조제3항 · 제5항, 제44조제3항).
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로 한다.

제24조제3항 중 “청구하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(支廳)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(支院)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”를 “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(支廳)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(支院)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”을 “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로 한다.

제44조제3항 후단 중 “검찰청”을 “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고지) ① (생략) 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(所在)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싣고 <u>검찰청</u>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	제13조(고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검찰청</u> 또는 <u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</u> -----.
③ (생략) 제24조(기소 전 몰수보전명령)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<u>청구하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(支廳)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(支院)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.</u>	③ (현행과 같음) 제24조(기소 전 몰수보전명령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<u>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(支廳)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(支院)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.</u>
④ (생략)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	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

받은 사람(피고인은 제외한다)
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그 사
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
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
알릴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
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
검찰청 또는 그 지청의 게시판
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
한다.

제44조(추징보전명령의 집행)

① · ② (생략)

③ 추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민사집행법」이나 그 밖에 가압류 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.

-----지방
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
공직자범죄수사처-----
 -----.

제44조(추징보전명령의 집행)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견

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
처-----.